

무등산국립공원 사유지 비율 69.5%

전국 수준 줄이기 최소 40년 걸릴듯

(평균 15.8%)

사유지 비율이 가장 높은 무등산국립공원이 전체 국립공원 평균 수준으로 사유지 비율을 낮추는데만 최소 4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예산 부족으로 팔려고하는 무등산국립공원 사유지마저 매입하지 못하고 있어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나아가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유지 비율을 줄이려는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무리행정을 펼치고 있다.

‘예산 탓’ 연차별 계획조차 못세워...매수 신청자 103명 대기

국립공원 효율적 보전·관리, 민원해소 위해 매입 앞당겨야

7일 환경부와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0억4900만 원을 들여 무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94만7751㎡(약 1㎢)를 매입했다. 매입 면적에 비용을 나누면 1㎡당 평균 3217원을 들인 셈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면적이 75.425㎢인 무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69.5%·52.444㎢)을 전국 평균(15.8%)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40여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매년 3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꾸준히 1㎢(1㎡당 3217원 기준)의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최소한으로 걸리는 기간이다.

문제는 지난해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국립공원에 지원되는 사유지 매입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유지 매입 비율을 낮추는데 이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

실제 올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배정된 사유지 매입 예산은 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 국립공원 승격 이후 무등산 내 사유지를 팔기 위해 신청한 토지 소유자 132명으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가운데 29명으로부터 약 1㎢를 협의 매수했다. 국립공원에 속한 사유지를 팔기 위해 땅

국립공원 전체 면적과 사유지 면적

(2013년 말 기준, 단위: ㎢)

| 국립공원 | 공원 면적 | 사유지 면적 / 비율 |
|------|---------|--------------|
| 무등산 | 75.425 | 52.444 69.5% |
| 지리산 | 483.022 | 72.586 15.0% |
| 계룡산 | 65.335 | 23.042 35.3% |
| 설악산 | 398.237 | 16.092 4.0% |
| 속리산 | 274.766 | 74.898 27.3% |
| 한라산 | 153.332 | 4.471 2.9% |
| 내장산 | 80.708 | 27.471 34.0% |
| 가야산 | 76.256 | 19.000 24.9% |
| 덕유산 | 229.430 | 44.331 19.3% |
| 오대산 | 326.348 | 39.215 12.0% |
| 주왕산 | 105.595 | 40.941 38.8% |
| 치악산 | 175.668 | 37.162 21.2% |
| 월악산 | 287.571 | 61.422 21.4% |
| 북한산 | 76.922 | 25.746 33.5% |
| 소백산 | 322.011 | 49.851 15.5% |
| 월출산 | 56.220 | 21.704 38.6% |

※무등산 사유지=총 3103명 소유 (사할 10곳 등 법인 234개 포함) (자료:환경부)

을 내놓은 신청자 103명(약 3.6㎢)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대기 중이다. 현재 무등산국립공원 사유지는 총 3103명(사할 10곳 등 법인 234개 포함)이

소유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사유지 매입 비율을 높여 ▲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사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유지 매입용으로 책정한 예산 47억 가운데 무등산국립공원에 30억 원(63.8%) 이상 지원하고 있어,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더는 요구할 것도, 해줄 것도 없다는 식의 반응도 나온다.

더 나아가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사유지 비율을 언제까지, 얼마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마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민원을 해소하고 국유지 비율을 높여 무등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면서 “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유지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2 해질 18:07 달출몰 17:59 달몰 05:59

오늘 '한로' 곧 서리오겠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맑음 | 11/25 | 보성 | 맑음 | 8/23 |
| 목포 | 맑음 | 13/23 | 순천 | 맑음 | 13/25 |
| 여수 | 맑음 | 15/22 | 영광 | 맑음 | 10/24 |
| 나주 | 맑음 | 8/25 | 진도 | 맑음 | 10/24 |
| 완도 | 맑음 | 12/25 | 전주 | 맑음 | 10/25 |
| 구례 | 맑음 | 8/25 | 군산 | 맑음 | 10/24 |
| 강진 | 맑음 | 9/25 | 남원 | 맑음 | 8/25 |
| 해남 | 맑음 | 8/25 | 흑산도 | 맑음 | 16/20 |
| 장성 | 맑음 | 8/24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바다 | 오전 | | 오후 |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앞바다 | 북동~동 | 0.5~0.5 | 북동~동 | 0.5~0.5 |
| | 면바다 | 북동~동 | 0.5~0.5 | 북동~동 | 0.5~0.5 |
| 남해 | 앞바다 | 북동~동 | 0.5~0.5 | 북동~동 | 0.5~1.0 |
| | 면바다 | 북동~동 | 0.5~1.5 | 북동~동 | 1.0~1.5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47 |
| 운동 | 60 |
| 빨래 | 90 |

◇주간 날씨

| 9(목) | 10(금) | 11(토) | 12(일) | 13(월) | 14(화) | 15(수) |
|-------|-------|-------|-------|-------|-------|-------|
| 13/26 | 14/27 | 15/27 | 14/26 | 15/25 | 13/23 | 13/24 |

광주교육청, 사학규제 조례안 제정 추진

교원채용 협의·전형위탁 권장

사학법인 “자율성 침해”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의 지원과 지도·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자 사학법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학기관 회계운영과 재산, 인사 등을 지도·감독할 기준을 마련하고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존 조례에 비해 교육청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신규채용 전형, 공익제보자 보호, 예·결산 지침, 재정 보조, 사학기관평가협의회 구성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 광주지역 29개 사학법인들은 지난 1일 교육청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 조례 제정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이 법에도 없는 사립학교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조례라는 자치법규를 또 내세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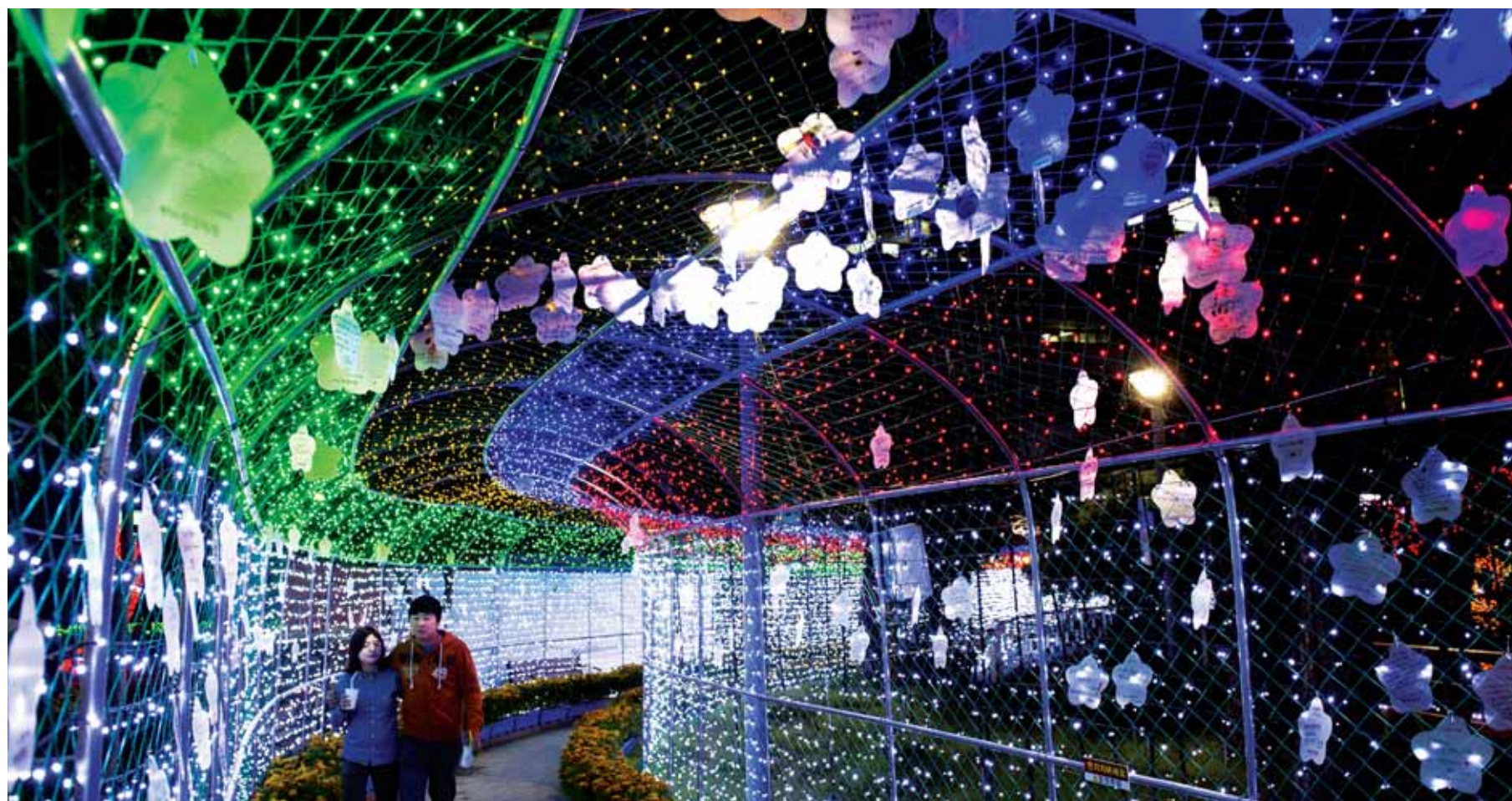
조례안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교육감이 사학과 협의하도록 하거나 신규채용에 따른 전형 위탁을 학교법인에 권장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도 없으며 조례로 규율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도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 않겠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

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망터널’ 오색 안개등 사이로 ‘추억의 7080 총장축제’를 하루 앞둔 7일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 설치된 소망터널을 찾은 시민이 야치형 오색 안개등 사이로 걸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www.kosep.co.kr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Small Giant's가 될때까지 남동발전이 함께 하겠습니다

21C 글로벌위력더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애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

- 1. **경영혁신** | 생산성·품질·고객서비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기술보완 및 경영인력교육 지원사업, 성과공유제, 생산성 향상사업, 맞춤형 마케팅, 해외마케팅, 특허지원사업, 신기술개발사업, 벤처기업인증, 중소기업인력, 품질, 안전, 보건,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 2. **인재개발** | 중소기업인사관리·HRD 운영 지원사업, 크리 크리 인력개발 지원사업, 시장개척단·수준별·기술개발사업, 순환성취, 유망인재양성사업, 지원사업, 채용포럼 지원사업, Career 지원사업
- 3. **연구개발** | 기업중소기업합동연구 지원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사업, 원장기초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 4. **위험관리/재정지원** | 신기술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사업, 발전안전인력지원사업, 국가인력지원, 유망기업지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한국남동발전(주)
KOREA SOUTH-EAST POWER CO.